

모두 말씀

2018.4.16.(월) 10:00~11: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업권별 협회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경제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가계신용은 1450.9조원으로,
증가규모가 전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추세치인 8.2%보다 낮은 증가율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 '18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위협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❶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만 보아도
그간의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대출비중이 절반이상으로
상당수 차주들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 금감원) : ('14)23.6 → ('15) 35.7 → ('16) 43.0 → ('17) 44.5

특히,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이 24.4%로
전체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인
9.5%에 비해 높아
이들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과
세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❷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도
가계부채 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쉐 업권 신용대출 증가규모(조원, 금감원) : ('16) +14.2 → ('17) +18.1

'17년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소비심리 회복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금년에는 新DTI 시행 등에 따라
줄어든 대출한도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③ 무엇보다 작년말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증가규모/증가율(조원, %, 금감원) : ('16) +33.1/12.1 → ('17) +47.5/15.5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Ⅲ. '18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부는 '18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18년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우선, '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 모기지 시장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 공급하고, 적격대출 공급액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하여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금요율 인하 등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중인 DSR을
10월부터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겠습니다.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여신심사의 기본을 실행하는,
벌써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경험을 토대로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토록 하여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유사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②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다각적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금융권 등과 협의하여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리상승기에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적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가산금리 산정상의
불합리한 요소 등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③ 既 발표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도입된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유예 시행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소극적 운영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서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연체금리 인하와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프로그램 운영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대율 규제개편,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금융인 여러분!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시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 가처분소득증가율(% , 한은) : ('15) 5.8 → ('16) 3.2 → ('17) 4.5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7년)이 97.5%로 OECD 평균(70%)을 상회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